

<친환경 소식>

◎한친농, 유기농자재 및 친환경비료 현안 토론회 개최



▶ 당 협회가 지난 9월6일 개최한 ‘유기농업자재·친환경비료 등 현안 협의를 위한 확대 이사회 및 토론회’에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졌다. 업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영세율 적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친환경농가 대다수가 영농자재 구입에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이에 협회는 농민 후계자를 동원 국회 기재위 의원에게 탄원서를 올리게 하고 상세자료를 작성 국회 요로에 건의하여 금번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공시제로 통합하되 비효·약효를 ‘자율표시’ 하는 안과 현행 표시기준 개정안 및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항목 360종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과 퇴비 및 유기농자재 잔류허용기준을 1ppm 이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집중논의가 이뤄졌다. 협회는 이를 정리하여 관계당국 등 요로에 건의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자재 정부보조사업 공급체계 사용자위주로 바뀐다

▶ 2016년도 정부의 유기농업자재 보조사업지침이 한번 농약검출 등 부적합이 되면 업체의 전품목의 보조사업을 2년간 참여치 못하게 된 규정 때문에 상반기내내 시끄럽게 문제시 된바 있다. 다행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업종을

품목단위로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 정부는 동 보조사업(중앙정부 20%(예산 32억) 자자체예산 30% 자부담 50%) 시행에 있어 금년도에는 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1개소만 시범공급한 것을 내년에는 3곳 정도로 늘리고 별도로 친환경농업 자조금사업으로 1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용자인 친환경농업인 단체가 공시 유기농업자재 구매 공급하는 체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당회도 이들 자재 소비자단체와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친환경광역단지 지정 폐지 중소규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육성한다

▶ 지난 28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친환경광역단지 육성 예산지원사업 심의를 위해 본회 안인박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시군 또는 읍면단위 친환경광역단지를 6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이제 까지 지원한 광역단지는 인센티브사업으로 돌리고 새로이 중규모의 10~50ha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광역단지는 워낙 규모가 커 단지내 비 친환경농가와 불협화음이 커지고 퇴비장 등 설립에 따른 민원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금번 2017년도분 경남 산청 등 8개단지를 심사후 지원을 결정하고 향후 농식품부는 매년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지원 중소규모 단지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제5회 경북도 친환경농업인대회 개최 :정부 지원확대 및 판로개척 난항 고심

제5회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대회가 지난 20일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엔 경북 각지에서 1,200여 명의 친환경 농민들이 참가했다.



경북친농연 회장은 “지금 농업 현실은 정말 암담하다. 최근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된 상황에서, 이제 농민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정부의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과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고 촉구했다. 전친농 회장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에 있어 중요한 제도이므로 조속 정착되게끔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며 참여를 당부했다. 친환경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 상황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판로 개척 문제가 가장 어렵다. 가뜰이나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돼 친환경 농사를 접고 관행농으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판로 지원대책이 없으면 친환경 농업 발전은 없다” 불만을 토로했다.

<농정 소식>

◎20년전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는 쌀값대책...논으로 달려간 여야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는 쌀값 대책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농촌현장을 찾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소속 의원들이 2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두창리의 논에서 수확을 앞둔 벼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좌 사진).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벼골제 부근 갈아엮은 논에서 벼 이삭을 살펴보고 있다(우 사진)



▶쌀값 폭락 성난 농심 심상찮다...전국 농민단체 연이은 켈기

“벼 갈아엮기 전에 쌀값 21만원 공약 파기한 대통령 갈아 엮어야” 구호(농정신문) 지난달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회장 조원희)는 상주문화회관 앞에서 쌀값 폭락 대책 촉구를 위한 상주 농민대회’를 열었다. “30년전 가격으로 쌀값이 대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절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이 밥쌀 수입에 반대하며 쌀값 폭락을 예고해 왔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생산비도 안 되는 최저가격을 주면서 수출농업, 융복합 ICT 농업을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 농민들은 “자식같이 키운 쌀 갈아엮고 태웠다” (사진 우)



◎물 만난 고기 '란파라치' 주의보...김영란법 영향 화훼·인삼·한우시장 급랭
“몰래카메라 들고 결혼식장·골프장 등 '사방팔방' 출동. 결혼·장례식장
화환 썰렁...공직자들은 '자나깨나 몸조심’ “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주말, 일명 '란파라치'라 불리는 김영란법 전문 신고자들은 '먹잇감'을 찾아 활발히 움직였다. 연휴를 맞아 결혼식이 많은 데다, 장례식장에는 문상 온 조문객들이 몰려 경조사비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례식장, 결혼식장, 골프장과 립살롱이 집중 감시대상이다.



▶'란파라치'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 지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몰래카메라'다. 안경에, 가방에, 옷 소매에 무심코 지나쳐서는 보기 힘든 크기의 몰래카메라를 달고 현장에 간다.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가서 화환에 적힌 이름의 인물들이 별도로 부조까지 했는지 확인해 한 사람당 경조사비가 10만원을 넘었는지 꼼꼼하게 따진다. 경조사에 갔으면 의심을 사지 않게끔 '란파라치'들도 부조를 한다고 한다.

▶란파라치들은 골프장의 경우 틈틈이 안면을 트고 지내 온 직원이나 캐디들이 고위 공무원 등 예약 손님이 부킹한 사실을 알려오면, 그곳으로 단속을 나간다고 한다. 일부 란파라치들은 고급 식당가 종업원, 매니저 등과 안면을 트고 친분을 유지한 뒤, 성공하면 수입을 일정 비율로 나누자는 제안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란파라치 양성소장은 “전직 공직자도 많다. 전직 경찰서장도 단속한다. 관련 규정 위반 적발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한다(연합뉴스)

◎김영란법 대응 대책 회의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 위축 등 가시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 추석에 한우와 인삼 상대적으로 고가인 농축산물의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말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축산, 과수화훼특작, 외식분야 등의 생산자단체와 관련 기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상품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며 과대포장 소포장화, 꾸러미상품, 직거래활성화, 자가 소비용 구매촉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렇게 대비하자

분산 출하 유도·실속형 상품개발 확대, 사과·배, 소비자 상대 홍보 강화…
명절 집중 출하 탈피, 인삼, 신상품 개발·지역축제 등 직거래 통해 판로 확대,
화훼, 동양란 축수 줄이고 서양란 관상용 위주로 전환 등 대안논의

<2016 농식품부 국정감사 소식>

- ▶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정부 사과·책임자 처벌 촉구
- ▶ 10월 중순에 쌀 수급대책 마련, 안일한 발상” 질타에 올해는 9만9,000톤 사료화 했지만 내년에는 25만톤으로 대폭 늘린다”
- ▶ 전경련,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도 나서라”
- ▶ 3불(不) 정책 일관 박근혜 농정 4년, 농민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 혹평
- ▶ 野, 김 장관 자진사퇴 촉구…김 장관 “부처현안 이끌겠다”

▶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식품부에 대한 첫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연출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청와대의 '수용 불가' 발표로 농식품부가 정국 경색의 진원지가



돼버린 만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더민주 의원들은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김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업무보고는 물론 부처 현안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철저히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식물 장관'으로 취급했다.

▶ 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증인선서를 했지만, 역할은 그것 뿐이었다. 업무추진 현황은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가 보고했다.

▶ 소 브루셀라병 예방, 쌀값 폭락 대책, 가축전염병 매몰지 관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책, 농식품 수출 정책 등 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이준원 차관이 김 장관 대신 답변했다. 더민주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쌀값 대란이 몰아치고 있고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 어려움을 헤치고 우리 농촌을 구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며 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 김현권 의원은 온갖 문제로 부적격 의견을 받았음에도 반성과 성찰은 커녕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부인하고 SNS를 통해 '지방대 출신의 흙수저' 운

운하며 황당한 의견을 밝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김 장관이 aT 사장 재직 시절 다니는 교회에 회삿돈으로 기부한 배경을 따지며 “장관 때문에 국정이 중단 상태이고 대통령에게도 짐이 되고 있다. “의혹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을 담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농식품부 현안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영광 한빛원전 온배수로 곰소어장 소멸위기 “온배수 오염실태 조사자료 은폐의혹” 집중 포화, 학교급식 수입수산물 공급·콜레라 원인 등 도마위, 한진해운·세월호 인양에 초점

▶유통공사 국정감사 : 쌀대란 우려 속 싸라기 쌀 수입 용역 ‘못매’ 가격 조급만 올라도 수입해 가격 조절 ‘불신 초래’ K-밀 사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관여문제 집중 거론

▶농어촌공사 국감

저수지 4개중 1개는 농업용수 부적절, 임직원 비위행위 실태 심각

▶전라남도 국정감사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율 전국 평균치 웃돌아 대책 시급, 전남쌀 홀대 대책 마련·마을공동급식사업 확대 등 주문

◎여야 전격합의, 국감 19일까지 나흘 연장…유기농자재 부가영세율 질의 있을듯

▶여야 3당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여야 대치로 차질을 빚었던 국정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초 국감은 15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첫 일주일 동안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함에 따라 나흘간 일정을 추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부가세영세율 적용 국감질의는 기재위 소속이자 세법소위원회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안동)이 질의준비를 마치고 질의할 예정이다.

<비료 농약소식>

◎비료·농약 혼합제는 국내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제도이다

▶비료·농약 혼합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해남 제주대 교수는 최근 한농연이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 ‘비료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절감을 위해 비료·농약 혼합제 개발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00년께부터 비료·농약 혼합제가 개발돼 30여종을 상용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규정만 마련돼 있을 뿐이라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비료·농약 혼합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정부나 업계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 8월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해 비료·농약 혼합제 근거규정을 마련,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지금까지 공정규격 등록 신청은 단 한건도 없다. 업계는 돈되면 뭐든지 개발하려 할 것인 바 왜 한건도 신청이 없는 것인가.

▶비료와 농약의 사용시기가 달라 상승효과를 가져올 작물이 극소수다. 시험을 거쳐 등록 하겠지만 약해도 더 잘 발생할 우려가 있다. 농약 비료성분의 화학반응 등이 달라 공장 생산기계 부식이 쉽게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

▶왜 일본이 수십년부터 혼합제를 개발해 왔지만 사용이 줄어들고 지지부진 답보 상태 이겠는가. 혼합제 규정마련 협의회를 거쳤지만 농약업계는 농약위주로 비료업계는 비료위주로 규정마련을 주장함에 따라 죽도 밥도 아닌 규정이 돼버렸다. 영양제+생조제 혼합제만이 검토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이는 반대하면서 다른 분야만 트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따라서 현행 혼합제 규정은 무명무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안으로 정부는 우량비료 지정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해화학, 일본에 복합비료 140t 수출

▶남해화학(주)이 최근 일본 JA전농을 통해 복합비료 140t을 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JA전농이 자국의 농자재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로부터 먼저 주문받은 뒤 주문량에 맞춰 우리나라 비료를 수입, 농가에 직배송하는 것이다. 수출된 비료는 ‘질소16%-인산16%-칼리8%’로 지속적인 수입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농자재가격 인하 정책을 언제까지 이어갈지 알 수

없고, JA전농이 보다 좋은 수입여건을 갖춘 곳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이나, 금년내 1000톤 정도를 수입해 갈 예정이다.

◎세계 농약, 비료업계 합병바람

▶바이엘이 몬산토를 74조원에 인수 농약·비료·종자 세계 최대 기업이 탄생했다. 바이엘은 지난 14일 “660억달러에 몬산토를 인수하기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병시 농약·비료·종자까지 종합하는 세계 최대 농화학 기업이 탄생한다.

▶한편 캐나다 비료업체 포타쉬가 같은 캐나다 비료업체인 아그리움과 합병함으로써 시가총액 3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비료업체가 된다. 포타쉬가 52%, 아그리움은 4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하반기 조직개편에 총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하반기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개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업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중복된 기능으로 인한 직원이 1,032명이나 늘어 비효율적인 조직이 된 것이 배경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인력재배치와 조직 효율화를 통해 슬림하고 의사결정이 빠른 조직을 만들겠다 “며 해외사무소는 연말까지 폐쇄하고, 사업기능은 현지법인이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계열사의 수출입 업무는 NH무역으로, 양곡 판매는 농협양곡으로 일원화한다.

◎부적격 수입농산물 크게 증가

▶올 부적합률 21.5%, 연 평균 3만2천건, 150만톤 적발, 옥수수>바나나>오렌지 순해충이나 금지식물이 포함된 부적격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수입농산물은 16만1,362건으로 연평균 3만2천여 건에 달했다. 시기별로 보면 2012년에는 2만9,598건으로 3만건 미만이었지만 지난해는 3만5,847건까지 증가했다. 전체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건수 대비 부적합률을 보면 2012년에는 15.6%였으나 지난해는 17.2%까지 높아졌고,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1만 2,679건을 검역한 결과 2만4,268건이 부적합 처분을 받아 부적합률이 21.5%를 기록했다. 이는 5년 평균 부적합률 12.3%와 비교하면 9.2% 급증한 수치다.